

보도시점 2024. 6. 26.(수) 15:00
(2024. 6. 27.(목) 조간)

배포 2023. 6. 26.(수) 11:30

출연연, 자율성에 기반한 선도형 연구개발 생태계 중심으로 탈바꿈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 개최
-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방안, 2024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 등 3개 안건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안)」, 「2024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민·군 기술협력사업 2024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근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 (기능) 과학기술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위임 안건의 심의·의결
- (구성) 총 31명(과학기술혁신본부장(위원장), 관계부처 실장급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10명)

①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안)】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뤄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속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속조치로서 마련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방안은 빠르고 폭넓은 기술환경 변화에 출연연이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를 실현하려는 조치로서 출연연이 나아갈 방향과 제도개선 등의 실행 수단을 담았다.

첫 번째로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수준까지 기관운영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최소한의 요건 하에 자체 정원을 운영하고 기간제 직원의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게된다. 연초에 정하면 변경되지 않던 인건비 집행계획(실행인건비)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증액 조정할 수 있다. 기술료 수입의 인건비 집행 허용 등을 통해 출연연이 활용할 수 있는 인건비 재원도 확대한다. 기관장 재량으로 출연금 연구 사업의 세부 과제 간 예산 조정도 가능하게 되어 적시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석학 등 핵심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비공모 특별채용을 허용하고 파격적 대우가 가능한 체계를 만든다. 외부 강의로 상한 기준 등도 대학교수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두 번째로 공동출입증 도입, 경계벽 제거, 출연연 통합 (가칭)지식포털 구축과 연구자 정기 모임 등의 지원을 통해 소속기관에 구애 없이 출연연 구성원 간 자유롭게 교류·협력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로 자율성을 토대로 출연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리는 대표 브랜드로서 국가 임무 중심의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Lab)을 도입한다. 우선 올해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에서 선발된 협력체계를 NSTL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획기적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경영의 장치이자 출연연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방향타로서 현재의 기관장 평가와 연구사업 평가를 별도로 시행하는 분절적 체계를 2026년부터 격년 단위 통합점검 단일체제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기관의 임무에 맞는 장기·고난도 연구, 기관 내·외간 협력 등을 수행하는지를 석학의 피어 리뷰(peer review) 등을 통해 질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우수기관은 차회점검을 유예하고 공개된 실적 등을 자동 수집하는

등 효율화·단순화된 체계로 구축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점검 지표 등은 관련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 및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가며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재정을 지원받는 기관으로써 투명·윤리경영으로 국민적 신뢰도 확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출연연 지원·육성 중심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능을 개선하고 체제를 정비해나간다.

② 【2024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과기정통부는 「'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특정평가 결과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보고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는 전략계획서상 평가시기가 도래한 사업에 대해 소관부처가 자체평가하고 과기정통부가 성과목표 달성도와 우수성을 상위점검하는 것으로, 금년도는 21개 부처 208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금번 중간평가는 그간의 연구개발사업의 낭비적 요인 제거를 위하여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하여 하위 20% 사업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유도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우수 52개 사업, 보통 110개 사업, 미흡이 46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는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등 중요성이 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평가로,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심층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평가이다.

이번 특정평가는 9개 다부처 사업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다부처 사업의 기획 대비 예산 투입 현황, 성과관리체계, 부처간 성과의 연계·활용 현황 등을 평가하여 다부처 사업에 대한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는 출연연의 역할과 책임(R&R)에 따라 수립된 계획서에 대한 목표 달성도 및 성과의 우수성을 점검하고 기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평가로, 기관장 임기 동안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기관운영평가와 기관의 중장기 연구목표에 대해 최대 6년간의 연구 성과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연구사업평가로 이원화하여 실시한다.

이번에 보고가 이루어진 기관평가는 '24년 8월까지 기관장 임기종료 예정인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평가를, 중장기 평가 주기 도래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사업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우수’ 3개, ‘보통’ 6개, ‘미흡’ 1개 기관이다.

※ (우수) 세계김치연구소(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기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연구)
(보통) 국가과학기술연구회(기관), 한국나노기술원(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
광주과학기술원(연구), 나노종합기술원(연구), 한국원자력의학원(연구)
(미흡) 한국나노기술원(연구)

이와 같이 보고가 이루어진 평가 결과는 우수 성과 포상 및 대국민 평가 결과 공개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특히 중간평가와 특정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 예산 배분·조정 및 사업 개선, 기관평가 결과는 기관장 성과연봉 및 능력 성과급 차등 지급, 차기 계획서 수립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③ 【민·군기술협력사업 2024년도 시행계획(안)】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5조에 따라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는 범부처 「민·군기술협력사업 2024년도 시행계획(안)」을 논의하였다.

올해 시행계획(안)에서 제시하는 중점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군 기술협력을 선도하는 도전적 R&D 투자를 확대한다.

우주, 인공지능(AI) 등 16대 중점기술분야 중심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첨단항공엔진 등 도전적인 R&D를 추진한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기술협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테러 대응을 위한 방탄기술 개발 등 임무 중심의 R&D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민·군기술협력 생태계 경쟁력을 제고한다.

우주, AI,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60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하여 R&D 자금을 집중 투자한다. 산·학·연·군으로 구성된 첨단민군 R&D 협의체를 가동하여 군 소요와 연계 가능한 첨단 민간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로봇, 반도체 등 방산 기반산업의 석박사급 전문인력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한다.

셋째, 지원시스템 강화를 통해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무기체계 도입 가능성이 높은 20여개의 유망 수출국가를 발굴하여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수출기업 애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방산수출 지원 카라반 운영 확대 등 기업 지원시스템을 강화한다.

넷째, 민·관·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방위산업발전협의회(산업부-국방부장관 공동)의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군기술협의회 위원장을 기존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강력한 민군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 기존 산업부·국방부·외교부 등에서 중기부, 각 군, 수출입은행, 방위산업진흥회까지 확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의하고 소통할 것”임을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	책임자	과 장	이우진 (044-202-6740)
		담당자	사무관	정극주 (044-202-6746)
<공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혁신지원팀	책임자	과 장	온정성 (044-202-4750)
		담당자	사무관	구서희 (044-202-4751)
<공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	책임자	과 장	조경옥 (044-202-6930)
		담당자	사무관	안민호 (044-202-6933)
		담당자	사무관	손희수 (044-202-6931)
		담당자	사무관	최승혁 (044-202-6932)
<공동>	산업통상자원부 첨단민군협력지원과	책임자	과 장	임채욱 (044-203-4150)
		담당자	사무관	이순호 (044-203-4152)



참고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 개최계획

□ 개 요

- (일시) '24. 6. 26.(수) 10:30 ~ 12:00
 - (장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광화문)
 - (참석대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제), 정부위원(20명), 민간위원(10명) 등
- ※ 간사 : 과학기술정책국장

□ [안 건] 심의회의 상정 1건, 운영위원회 전결 3건

번호	안 건 명	제출부처	비고
1호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과기정통부	심의회의 상정
2호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	과기정통부	운영위원회 전결
3호	2024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과기정통부	
4호	만·군 기술협력사업 2024년도 시행계획(안)	산업부	

※ 상정 안건 및 안건 순서는 변동 가능

□ 회의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0:30 ~ 10:35 (5분)	개회 및 인사말씀	혁신본부장
10:35 ~ 11:55 (80분)	4개 안건	안건 발표 및 토론
11:55 ~ 12:00 (5분)	마무리말씀	혁신본부장

참고 2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 주요내용

1 추진 배경

- **(환경 변화)** 첨단기술 확보에 기술·주체 간 융합·협력이 필수가 됨에 따라 고위험에 도전하는 자율적 혁신생태계로 전환 필요성 증대
 - 더욱이 주요국들의 정부주도 핵심기술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다 장기적이고 폭넓은 시야를 가진 정부·국가기관의 역할 재조명
- **(출연연 현 주소)** 과거 첨단산업 위주 경제구조로 전환*을 이끌었으나, '90년대 이후 시대변화를 반영 못한 제도로 기능·역할에 한계
 - * (반도체) 세계최초 64M DRAM('92.), 1G DRAM('96.) 개발 → 반도체 강국의 기반 마련 (이동통신) 세계최초 CDMA 방식 상용화('96.) → 이동통신 강국으로 도약 계기

⇒ 출연연의 **특장점***을 살리면서 現시대와 기술환경에 발맞춰 다양한 혁신주체가 협력하는 플랫폼으로 변화토록 장애요인 해소 필요

* (예) 안정적 인프라, 장기간 집단연구, 기술축적 등 국가임무 대응에 적합

2 추진 방향

- **(물리적·문화적 장벽 제거)** 공동출입증 도입·경계벽 철거로 일상 속 교류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 모임 지원 등 협력 문화를 내재화
 - ※ (기타 추진사항) △출연연 간 세미나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식포털 구축, △편의시설 공동예약 시스템, △출연연 차원의 체육·문화행사, △연합동아리·공동교육 등
- **(제도적 장벽 제거)** 기술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토록 인력·사업비 등 기관운영 핵심사항 자율화 : 「출연연 운영규정(훈령)」 제정
 - **(인력운용)**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수급할 수 있도록 자체정원을 자율화*하고 기간제 채용 절차를 간소화**
 - * 이사회에서 자체재원 조달계획 적정성 등 확인 후 승인, 출연금 보전 금지 명문화
 - ** (종전) 기관 자체심사 후 연구회 추가 심의 → (개선) 총량 내에서 자체심사만 거쳐 채용

- (인건비·처우) 실행인건비 증액을 허용(이사회 의결)하여 경직성을 제거하고, 기술료의 인건비 집행·결원 인건비 반납기준 합리화*로 재원 확대
 - * (종전) 인건비 수입 중 출연금+정부수탁의 비중 → (개선) 인건비 수입 중 출연금의 비중
- 핵심인재 영입을 위해 非공모 특별채용·과격적 인건비(자체재원,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제외)를 운영하고, 외부 강의료 등 대학교수 수준 상향 검토
- (사업비 등) 기관장의 주요사업비 과제 간 예산 조정 권한을 확대하고 연구장비 전기료 등을 고려한 합리적 경상비 조정

□ (체계 개편) 시대변화에 맞춰 대형성과 창출에 적합한 개방형 협력 체계(NSTL*)를 도입하고 자율적 책임경영을 실현할 점검체계를 구축

* 국가과학기술연구실(National Science & Technology Lab), 국가임무 수행을 위해 재원·장비 등 공동활용 체계를 갖춘 출연연 연구조직을 NSTL로 지정

- (종합점검 도입) 분절적 평가체계*를 실적 수집 자동화 등을 통해 행정부담이 경감된 격년단위 점검으로 효율화·단순화('25.시범, '26.전면도입)

* (現) 기관운영(3년)-연구사업(6년)으로 분절적 운영 중

- 기관 임무에 부합하는 장기·고난도 연구 수행 및 각 기관이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성장을 유도하는 지표·방식으로 수립 추진

- (국민신뢰 확보) 공공기관에 준하여 투명·윤리경영 의무*를 지속하고, 연구자 자율 행동규범·기관 임무수행 책임수단 마련

* 연구현장과 논의를 통해 점검항목·체계 등 정비·마련

- 정례 대국민 통합 보고대회 등 국민 및 타 혁신주체(대학·기업·정부)와 접점을 확대,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정체성을 수립·발전

□ (연구회 정비) '관리'가 아닌 '지원·육성'으로 임무를 재정립하고, 인력의 전문성 제고·규정 정비를 통해 연구행정 서비스 기능 강화

※ 「연구회 기능 개선 방안」 추후 별도 마련('24.말)

- 소규모로 산재된 지역조직*을 통합·권역화와 기관운영평가 반영으로 내실화하고, 개별부처 직할연과도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추진

* 이사회 승인없이 설치운영 중인 사실상의 지역조직(106개 중 44개)는 정식 조직화 또는 정비

참고 3

「2024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주요내용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결과

- (점검대상) 21개 부처 208개 사업('23년 예산 기준 6조 1,405억원)
 - ※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서 내 평가계획 시기가 도래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 (평가절차) 부처 자체평가('24.1~3월) ⇒ 과기정통부(혁신본부) 상위점검('24.4~5월)
 - (자체평가) 부처는 사업 '추진과정', '성과', '환류계획'에 대해 정성평가
 - (상위점검) 과기정통부(혁신본부)는 '형식적 요건', '과정 및 결과'의 적절성을 점검
-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교육계획 수립·실시 및 상대평가 등급 배분 준수 등
- ** 위원회 역할수행 적절성 및 사업별 이슈 해소, 사업별 평가 왜곡 및 전략평가 평가 유무 등

〈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주안점 〉

- ① 부처의 자체평가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강화
 -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에 따라 부처별 자체평가 실시계획에 근거한 자율평가를 확대하고 책임성을 강화
 - 부처별 성과평가·관리 담당자 의무 지정과 자체평가위원회 교육 실시 의무화로 자체평가 역량 강화 및 평가 내실화 추진단
- ② 상대평가를 통한 평가 변별력 강화
 - 부처별 당해연도 평가대상 사업 수 기준 '우수' 25% 이하, '미흡' 20% 이상* 등급 배분 비율 준수 의무화

* 부처별 당해 연도 평가대상 사업의 총예산 5% 이상 동시 충족
- ③ 효과적인 환류 체계 구축
 - 자체평가 결과로 도출된 최종 '등급'에 따라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결과와 예산 환류의 연계 체계 강화

- (평가결과) 우수 52개(25.0%), 보통 110개(52.9%), 미흡 46개(22.1%)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결과

- (대상사업) 평가사가 도래하거나 검토를 통해 평가 필요성을 인정한 9개 다부처 사업
 -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차세대극복연구개발사업 관서항정환정맥투입기개발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국민위해인자대응기체분자식별분석기개발 디지털트윈기반의예측및능동대차가능한호재재난자원통합플랫폼기개발 민군기술협력 전자약기개발 5G기반이동형유연의료플랫폼기개발
- (평가결과)
 - 당초 기획한 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및 부처간 협의를 통한 예산 변동에 따른 사업내용 조정·변경 논의가 필요

- 예타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사업은 재정 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필요
- 전략계획서 수립, 중간평가 등의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를 위해 다부처 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로 참여를 검토
- 참여 부처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사업 조정·제도 개선·성과 연계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역할 수행이 필요

③ 과기분야 연구기관 기관평가 결과

○ (평가 대상) 총 11개 연구기관

※ 기관장 임기 종료 예정 4개 기관, 연구사업평가 주기 도래 7개 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재평가 실시로 하반기 보고 예정

○ (평가절차) 부처연구회 자체평가(24.1~3월) ⇒ 과기정통부(혁신본부) 상위평가(24.4~5월)

- (자체평가) 성과목표 달성도 및 성과의 우수성 등 평가
- (상위점검) 자체평가의 적절성 점검*을 통한 상위 평가

* 자체평가의 절차·체계의 적절성, 운영·발전방향 제시의 적절성 점검

○ (평가 결과) 우수 3개, 보통 6개, 미흡 1개 기관

평가유형	출연기관명	평가 결과		
		자체평가	상위평가	최종결과
기관운영 평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74.72(보통)	적절	74.72(보통)
	한국나노기술원	72.30(보통)	적절	72.30(보통)
	세계김치연구소	84.27(우수)	적절	84.27(우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80.67(우수)	적절	80.67(우수)
연구사업 평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73.72(보통)	적절	73.72(보통)
	광주과학기술원	74.77(보통)	적절	74.77(보통)
	나노종합기술원	75.70(보통)	적절	75.70(보통)
	대구경북과학기술원	81.47(우수)	적절	81.47(우수)
	한국나노기술원	68.50(미흡)	적절	68.50(미흡)
	한국원자력의학원	77.93(보통)	적절	77.93(보통)

④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 (공통사항) 우수 성과포상 및 평가결과 공개 실시
- (사업평가 결과) '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되며 사업개선(이행조치계획 수립) 등에 활용
- (기관평가 결과) 평가등급에 따라 기관장 성과연봉 및 직원 능력 성과급 차등 지급, 평가결과 의견을 반영하여 차기 계획서 수립에 반영

I. 추진배경

-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3~'27)」에 따른 2024년 시행계획 수립

II. 주요내용

① '23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실적

- (과제1) 도전적 R&D 투자 확대
 - (정부투자) '22년(1,873억원) 대비 416억원(22%) 증가한 2,289억원의 정부출연 예산 투자
 - (임무중심 R&D) 국가적 이슈 해결 등 임무(Mission) 중심의 R&D 강화
 - * 인공지능 기반 대테러용 상황인지 및 의사결정지원 기술 개발('23~'26, 70억원)
- (과제2) 민·군기술협력 생태계 경쟁력 제고
 - (핵심 소재부품 개발) 방위산업 주요 품목 기술분석을 토대로 부처 합동 '방위산업 소재부품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23.12월)
 - (국방활용) 민간 첨단기술(AR·VR·XR 등)을 활용한 군 훈련체계 개발 등 민간의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 확대
- (과제3)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 (방산+산업) 중동, 미국 등 국가별 산업협력과 연계한 맞춤형 전략 추진
 - * '한-UAE 전략적 산업첨단기술 파트너십 MOU' ('23.1월), 미 보잉社 공동R&D MOU('23.4월)
 - (기업종합지원시스템) 방산수출지원 카라반 가동을 통해 방산수출 기업 애로 접수·해소, 중소 중견기업 방산 협력사 금융자금 등 지원
- (과제4) 강력한 민·군 협력체계 가동
 - (범정부 협력) 방위산업발전협의회(산업부-국방부장관 공동)를 대통령 주재 '방위산업수출 전략회의'로 격상하여 개최('23.12월)

② '24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안)

○ (과제1) 도전적 R&D 투자 확대

- (도전적 R&D) 우주, AI 등 16대 중점기술분야 중심의 R&D 투자 확대 및 첨단항공엔진 등 도전적인 R&D 추진
- (임무 중심 R&D) 테러대응을 위한 임무장비, 방탄 기술 등 임무 중심의 R&D 과제 중점 추진
- (우주실증) 기술개발이 진행 중인 우주부품의 발사환경 및 우주환경에 대한 성능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증위성 개발과제 기획 추진

○ (과제2) 민·군기술협력 생태계 경쟁력 제고

- (로드맵 고도화) 「방위산업 소재·부품 기술개발 로드맵」을 첨단 방산 5대 핵심 소재·부품 분야*로 재구성 및 핵심기술 확대(40→60개)
- * (기존) 육상, 해상, 공중, 우주, 소재 → (변경) 우주, AI, 유무인복합, 반도체, 로봇 등
- (Spin-on) 민간 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첨단민군 R&D협의체」를 가동하여 군 소요와 연계 가능한 첨단기술 발굴
- (핵심인력 양성) 로봇, 우주소재부품, 반도체 등 방산 기반 분야 석박사급 우수인재를 매년 2,000명 이상 양성

○ (과제3)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 (수출전략) 무기체계 도입 가능성이 높은 전략국가를 발굴, 차별화된 수출전략 마련
- (기업 종합지원 강화)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에 기업 애로 해소, 공급망 및 현지 시장정보 등을 지원하는 전담반 가동*

* 지자체·유관기관과 협업, 수출기업 애로 발굴을 위한 방산수출지원 카라반 운영

○ (과제4) 강력한 민·군 협력체계 가동

- (협력체계 강화) 방위산업발전협의회(산업부-국방부장관 공동)의 참여범위를 확대 하고, 민군기술협의회 격상(위원장 : 국장급→차관급)을 통한 사업 위상 강화

* 기존 산업부·국방부·외교부 등에서 중기부, 각 군, 수출입은행, 방진회까지 확대